

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공론화 시동

분권형 개헌·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감대

민주·정의당 ‘긍정적’... 보수 2野 “야합” 반발

국민의당이 25일 선거구제 개편 공론화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다당제 구도 하의 정치발전을 위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20대 국회의 의지는 선거제 혁신으로 시작되고 이를 전진시킴으로써 완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26.7%로 민주당(25.5%)을 앞섰음에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253석)에 훨씬 못 미치는 47석에 불과해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크게 뒤지는 결

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당이 유리해지고 다당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가능성을 고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선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는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경택 원내총무 의원은 “정략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응합 의사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며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충동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르면 26일 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른정당 측 정경택 원내총무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은 특정 당의 야합이나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의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지자율만큼 의석을 제대로 가지자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답합해서 이뤄질 일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지만 분권형 개헌에는 적극적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개헌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선거제 개편과 개헌 패키지에 한국당도 참여해야 마땅하다”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5당 대표 회동 27일 유력”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오는 27일에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주현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 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제안한 지도부 회동을 거듭 거절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와 (자유당 지도부) 일대일 회담이라면 (만남을) 생각해보실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실질적인 의제 제시를 요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10명을 모두 초청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측 인사와 합쳐 모두 15명 정도가 되면서 안보 현실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모임이 되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회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의 참여를 각별히 당부 드린다”며 “이번 주 회동이 안보협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감 일반인 증인 채택 찬반 팽팽

“갑질 우려” vs “필요”

해마다 무분별한 일반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이 기업인 등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주장하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필요하면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감기관인지 민간기관이 그런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증인으로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심 의원은 일반증인을 최소화하지는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기업인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상 기관으로 책임에 걸맞게 증인 채택도 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구조이므로 다른 의원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언론에서 혹독하게 검증하고 있는 만큼 민간인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총 46개 기업·금융회사 대표·회장·사장 57명이 포함된 ‘2017년 정부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명단’이라는 문서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盧 서거 8년이 지났는데... 잇을만하면 보수당 ‘막말 논란’

정진석 “부부싸움 후 자살” 파문

이명박 비리 수사 몰타기 전략

민주 “부관참시” 강력 규탄

노건호씨 사자 명예훼손 고소



“父 欠제까지 정쟁에 이용될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하고, 홀로 남은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막말, 부관참시”라고 규정하며 규탄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 8년이 지났지만, 여의도에서는 주요 고비마다 공방이 되풀이되며 애초 쟁점이 됐던 정치적 현안과 논쟁의 본질을 덮고 감정싸움으로 변신 뒤 소멸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전 청장이 앞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철폐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우선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고 응수했다. 조 전 청장은 유여곡절 끝에 임명됐으나, 곧바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차명계좌의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해 거듭 논란이 됐다. 결국 조 전 청장은 2012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올해 조기대선에서는 한국당 후보로 나선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홍 대표는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문재인 대통령)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3월에는 ‘성완중 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0.1% 가능성이 없지

만, 유죄가 되면 노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야사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이러한 표현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정 의원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측이 정 의원 발언을 감싸며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맛갈 부대’와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 등으로 공지에 몰리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정치공방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공천제 당규 명시·윤리장전 제정 추진

민주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공직자 선출을 위한 공천제도를 당규에 명시, 지도부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당 최초로 ‘윤리장전’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발위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재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대로 ‘기초협의회’

를 구성하고 당원들에게 발안·소환·토론·투표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민주주의 파격 도입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체계 보완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공천제도를 특별당규화하는 문제도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행세적으로만 돼 있는 공천 규정 등을 당규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도부가 바뀌 때마다 규칙도 따라서 바뀌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하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